

인천서점, 문구점으로 전락...지자체 지원 시급

입력 2021-05-11 오후 6:39



1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지역서점에서 서점주가 각종 문구류 뒤에 있는 책장에서 도서를 정리하고 있다./조윤진기자

인천의 지역서점들이 책보다는 학용품 등 문구류 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군·구 단위 지역서점 현황조사를 한 결과, 인천 지역서점 95곳 중 서적 매출액이 총 매출의 50%를 넘는 곳은 55곳(57.8%)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곳 중 37곳은 문구류 판매에 의존하고 있으며 2곳은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부평구의 A서점은 최근 서적의 절반 이상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문구류를 배치했다. 서적 판매만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서점의 서적 매출은 20%일뿐, 나머지 80%는 문구류 매출이다.

인근에서 25년간 자리를 지켜온 B서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팔리지 않는 서적 대신 담배와 체육복, 문구류 등을 들여 서적류가 차지하는 공간은 22%에 불과하다. 서구의 한 서점은 분식점을 같이 운영하다 결국 최근 폐업했다.

서점주들은 서적 판매 부진 원인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온라인 시장 확대를 꼽는다. 서점의 주 고객층인 학생이 줄어든 데다 젊은 층이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발길이 끊긴 것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 서점마다 10% 가량 할인해 서적을 판매하다 보니 순이익이 적다.

이 때문에 서점주에게 문구류 판매 등은 서점의 문을 닫지 않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원가율이 75%에 달하는 서적과 달리 문구류는 50% 수준으로 이윤이 크다보니 조금만 팔아도 더 큰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적류는 방학, 시험기간 등에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지지만, 문구류는 꾸준히 팔리는 덕분에 서점의 구멍난 재정을 채워주고 있다.

이문학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지자체가 경영난을 겪던 지역서점에 특색을 부여해 살린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서점에서 다른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것을 새로운 트렌드로 봐야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별로 서점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현장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서점 기반의 작가 전시회 등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조윤진 기자 기자

